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90
----------	------

발의연월일 : 2020. 11. 5.

발 의 자 : 문정복 · 강준현 · 김교홍
김남국 · 김승원 · 문진석
박상혁 · 소병훈 · 윤영덕
장경태 · 천준호 · 최강욱
허영 · 홍기원 · 황운하
의원(15인)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를 위해 수도권 3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에 나서고 있음.

이에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을 추진 중이나, 통학환경 제고 및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한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위치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각광 받으며 인근지역의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음.

이는 주택의 입지와 가격에 따라 교육환경과 여건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았으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과열과 전세가 상승을 수반한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본 개정안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이 정하는 학교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택지 내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 나.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시설 신설의 경우 「지방재정법」상의 투자 심사 절차 대신 지자체의 자체심사만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분야의 지방분권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3항).
- 다. 자체심사에 따라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또는 지원하도록 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4항).
- 라. 학교부지가 확보된 경우 본 개정안 시행 전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주택지구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한 학교용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 초등학교·중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배치 및 통학거리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초등학교는 1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2.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통학거리는 각각 1천미터 이내로 할 것
3. 학교용지의 면적은 주택지구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립 초등학교·중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설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갈음한다.

④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8조의2(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주택지구</u> <u>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한</u> <u>학교용지에 지방자치단체가</u> <u>「초·중등교육법」 제2조에</u> <u>따른 학교 중 공립 초등학교·</u> <u>중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학</u> <u>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u> <u>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u> <u>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u> <u>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배치 및</u> <u>통학거리 등은 다음 각 호의</u> <u>기준을 적용한다.</u></p> <p><u>1. 초등학교는 1개의 근린주거</u> <u>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u> <u>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u> <u>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u></p> <p><u>2.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통학</u> <u>거리는 각각 1천미터 이내로</u> <u>할 것</u></p> <p><u>3. 학교용지의 면적은 주택지구</u> <u>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p>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립 초등학교·중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설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갈음한다.

④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